

# 한·중FTA체결이 광주·전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농수산부문을 중심으로-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 · China FTA on Gwangju-Jeonnam Region  
-Mainly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정철기(Chul-Gi Jung)

(광주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

##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한중경제교류 현황과 FTA 전망      | 참고문헌     |
| III. 한중 FTA가 광주·전남에 미치는 영향 | Abstract |
| IV. 농수산부문의 대응방안            |          |

## Abstract

The economic development system of Korea is based on export-oriented strategy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So Korea is trying to conclude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Japan, and EU. The reason is that Korea will have more chances to develop there economy scale and trade surplus, but it will give the worst economic situation.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effects of FTA on Korea's GDP will be much greater than China's and Korea's trade surplus with China will expan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re layed in opposite situation. Especially comparing with other Provincial, Gwangju · Jeonnam has a relative importance por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So, Gwangju · Jeonnam have to prepare the effect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under the Korea · China FTA.

Key Words : Korea · China FTA, Gwangju · jeonnam,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 이 연구는 2008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I. 서론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을 이끌어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세계는 현재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국제교역환경 속에서 지역경제블럭의 확대와 이를 위한 초석인 FTA체결이 매우 활발히 수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위해 개방 및 교류를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2004년 4월 1일 발효), 싱가포르(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6년 9월 1일 발효), ASEAN(2007년 6월 상품협정 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2007년 4월)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인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유무역과 지역주의의 국제교역환경에서 동반자 및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한·중FTA 체결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특히 한·중 FTA체결에 따라 농수산업분야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분야별로 추가 연구가 수행되는바 정부정책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일반적으로 연관하여 분석하고 추후에 농업, 수산업을 분류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한·중 FTA 관련 연구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선행 연구에는 임윤상(2002), 남영숙 외(2004), 신태용 외(2005), Lee et al.(2005), 정인교(2006)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김시중(2007)의 연구에서는 한·중 FTA가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로 예측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협정의 포괄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여 협상 범위와 방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홍정륜(2007)의 연구에서는 한·중 FTA,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하고, FTA협상 과정에서 취약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것과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양평섭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중국 수출이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만큼 크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중간의 무역구조와 실질관세율 등에 대한 구조 분석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각종 학술지, 저널, 색인집과 요약집, 단행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수집·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중 FTA체결에 관한 논의와 전망, 이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II. 한중경제교류 현황과 FTA 전망

### 1. 한중 경제교류 발전과정 및 특징

#### 1) 한중경제교류 발전과정

한중간에 1992년 수교를 시작하고 그해에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1,180억 달러로, 2007년에는 1,6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중수교 이후 한중간 무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진다.<sup>1)</sup>

첫째 단계는 제1확대기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국간 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고, 교역규모도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양국간 직교역액은 1991년 44억 달러 1997년에는 237억 달러로 증가하여 6년간 연평균 32.2%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홍콩을 경유한 간접교역을 포함할 경우 68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연평균 27.3%씩 증가하였다.

둘째 단계는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한국은 1997년 말 심각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간 교역이 소강상태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 중 양국간 직교역이 1997년 237억 달러에서 2001년 315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역시 29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6.8% 증가한 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2.0%, 대중국 수입은 총수입의 9.4%를 차지하여 1997년에 비해 각각 2%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셋째 단계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제2의 발전기로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교역상품구조에서도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대외개방이 더욱 진전되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양국간 직교역액은 2001년 315억 달러에서 2005년 1006억 달러로 연평균 33.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05년에 한

1) 양평섭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8. pp.52-53.

국 총수출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총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넷째 단계는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로서 한 중 교역이 안정화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한 중 양국무역의 급등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2002~2004년 중 연평균 36.1%에 달했던 양국간 교역증가율이 2005년에는 26.7%로, 2006년에는 17.4%로 둔화되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3년 6월 29일 홍콩과 긴밀한 경제협력강화를 위해서 중국-홍콩간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여 차기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대중화경제권을 형성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sup>2)</sup>, 2005년 11월 중국-칠레에 체결된 협정은 상무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칠레에 민감한 영향이 있는 중국산 섬유류에 대해서 가능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처리, 혹은 예외 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양국의 마찰을 줄여가고 있다.<sup>3)</sup>

또한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양측간 FTA 기본협정에 의해 양 지역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10년안에 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sup>4)</sup>,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경제교류의 확대와 한중일 동북아시아 경제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어 한국과의 FTA는 동북아시아 경제를 확고히 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sup>5)</sup>

## 2) 한중 경제교류 특징

한중간 교역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임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재, 부품, 부분품 등 중간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시 관세를 면제받거나,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후에 관세를 환급 받게 된다. 둘째,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내 buyer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요자 중에서 외자계 기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이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중간 분업과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무역에서는 일반적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에서 한중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

2) 박장재, “광동의 화교경제와 중국-홍콩간 CEPA 체결의 영향”,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2003. pp.48-49.

3)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2005. pp.2-5.

4) 정재화, “중-ASEAN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 무역연구소, 무역협회, 2005. pp.7-9.

5) 이홍식 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KIEP, 2004. pp.98-104.

6)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에 수출하는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의 거래대상 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복수응답허용 응답수 439개)의 45.6%가 중국에 진출한자회사 또는 한국계기업 주 고객이며, 42.8%는 중국계 기업이며, 11.6%는 중국 내 제3국의 외자기업이 주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양평섭외, 전제자료, pp.99-100.

간재 업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고, 특히 중간재 업종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최종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일방이 우위를 갖는 부문중에 수산물도 포함되며, 양국이 모두 비교열위로 표시된 농산물가공품에도 현재는 중국산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표 1> 한중FTA체결시 경쟁 보완 패턴과 시장보호요구 예상 강도

분업관계	기 준		비교우위 국가	보호요구 예상강도	해당 업종
	경쟁관계	우위관계			
산업내 부역	비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없음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목재 및 종이제품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중	없음
			중국	중	비철금속, 가죽 및 모피, 무기화학, 기타농산물
	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전자부품, 기타전기기기, 화학섬유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화장품, 의약품, 일반기계, 기타화학제품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중	없음
			중국	중	통신기기, 플라스틱제품
일방적 부역	비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철강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석유제품 및 코코스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대	고무, 정밀계측기기, 조선
			중국	대	수산물, 의류
	경쟁적	양국 모두 비교우위		소	없음
		양국 모두 비교열위		소	농산물가공품, 음식료품·담배, 기타운송장비
		일방이 비교우위	한국	대	유기화학, 합성수지, 자동차
			중국	대	비철속광물, 기타섬유제품

자료 : 양평섭외, 전계자료-국문요약, p.11.

## 2. 한중 FTA 논의와 주요쟁점

### 1) FTA 논의 과정

한중 FTA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 수행하였으며, 2006년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 종료,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 필요성을 정책제안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에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제 2차 회의 개최(서울)-상품 분야 보고서 초안 논의,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하였다. 올해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를 시작으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하였으며, 8월 25일 방한한 중국 국가주석이 올림픽 폐막 이후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에서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이뤄진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중FTA 추진을 검토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 2) FTA 주요 쟁점

한중 FTA의 경제적효과로써 긍정적 효과로는 개방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GDP는 2.4-3.2%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간의 교역 및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대중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 개선효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 등에 기대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해외 투자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투자의 고급화 및 서비스산업의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인 농수산업은 국내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며,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는 농산물 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농수산업의 피해는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sup>7)</sup>

### 3) FTA 영향

한·중FTA체결에 따른 영향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나와 있다. 첫째, 한중간 교역에는 몇가지 특수

7)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 p.152.

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임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재, 부품, 부분품 등 중간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면제받거나,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후에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중국 내 바이어(buyer)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요자 중에서 외자계 기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중국을 임가공기지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이러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한 후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buy-back)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매입과 매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수출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48.9%가 중국 내 한국계 기업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러한 교역 특성이 한중간 분업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간의 분업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무역에서는 일방적 무역관계가 강한 반면, 가공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에서 한 중 간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재 업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고, 특히 중간재 업종 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최종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중간 교역 특성이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실질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한중간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산품에 대한 명목관세율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관세율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한중FTA가 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대중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FTA 이후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현재 이미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인하 효과가 작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판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기 보다는 중국 현지조달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중FTA로 무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확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는 중국내 한국계 기업, 중국 로컬기업, 중국내 제3국계 외자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전체 판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가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Ⅲ. 한중 FTA가 광주·전남에 미치는 영향

#### 1. 광주·전남 산업구조

광주·전남경제는 2005년 이후 제조업기반의 확대와 함께 미래 전략산업 성장,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자동차 및 가전을 중심으로 제조업기반이 크게 확대되면서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이 눈부시며,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광산업도 차츰 기반을 잡아가는 가운데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전남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함에 따라 취약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인구도 다시 유입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FTA는 국내기업 및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농수산업의 비중이 큰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가져올 영향은 매번의 FTA에 매우 민감할 것이다.

##### 1) 성장주어

광주 및 전남지역은 1990-2006년중 각각 평균 5.7%, 4.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국 수준(5.8%)을 소폭 하회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2%대로 크게 낮아졌다가 2000년 이후 다소 회복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외환위기 이후 3%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이 전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내외 수준이며 이중 광주 2.1%를 전남 4.8%를 기록하고 있다.

##### 2)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광주지역의 경우 1990-2006년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데 비해 제조업 비중은 거의 불변이다. GR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55.8%에서 2006년 64.1%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23% 내외 수준을 유지한 반면 건설업, 농림어업 등의 비중은 큰 폭 감소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9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농림어업(-2.9%), 광공업(-4.6%)이 감소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1.0%)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하락이 뚜렷하다.

전남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GR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990년의 15.5%에서 31.9%로 배증한 반면 농림어업 비중은 절반으로 하락(1990년 28.5%→



2004년 12.7%)하였으며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37.5%)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의 산업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sup>8)</sup>에서 광주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전남은 농림어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업에 특화된 구조이다. 광주는 서비스업 특화도가 안정적인 가운데 건설업의 특화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농림어업 특화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가운데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에도 특화하고 있다.

### 3) 산업구조 특징

광주지역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동산·사업서비스, 금융, 의료,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은 1990년대 초반 45.8%에서 2000년 이후 63.9%까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농림어업분야는 지역경제 성장에서 경제적부분의 점유 비율은 점차감소하고 있지만, 농업과 수산업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인 식량주권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2> 광주·전남지역 산업별 GRDP 성장기여율 추이<sup>1)</sup>

단위(%)

	광 주				전 남			
	전기간				전기간			
		90~94	95~99	00~04		90~94	95~99	00~04
GRDP(실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1.0	0.3	-1.7	-1.7	3.8	11.1	2.0	-1.8
광 업	-0.5	-0.6	-0.4	-0.5	-0.7	-0.9	-1.1	-0.2
제 조 업	15.3	13.8	19.8	12.4	31.0	24.9	32.3	35.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0	2.1	1.2	2.8	11.8	4.2	3.3	27.7
건 설 업	15.0	13.1	6.6	25.2	1.5	20.3	-21.9	6.1
서 비 스 업	69.2	71.3	74.5	61.8	52.7	40.3	85.4	32.4
(지식기반 서비스업)	(49.8)	(45.8)	(39.7)	(63.9)	(25.0)	(23.2)	(32.2)	(19.5)
(지식기반 이외 서비스업)	(19.4)	(25.5)	(34.8)	(-2.1)	(27.7)	(17.1)	(53.2)	(12.9)

주 : 1) 산업별 기여율 = (산업별 GRDP 변동분/전체 GRDP 변동분)× 100

자료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 경제구조의 변화와 과제, 2006.5. p.7.

8)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지역의 특정산업이 당해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동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여 지역산업의 특화정도를 분석하는 지표임. 동 계수가 1을 초과할 경우 해당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의하며, 산식은  $LQ_{ij} = (X_{ij}/X_i) / (X_j/X)$ , (X : 전국 전산업,  $X_i$  : i지역 전산업,  $X_j$  : 전국 j산업,  $X_{ij}$  : i지역 j산업)이다.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의 경우 주력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 광주지역의 경우 3대 주력업종(자동차·가전·타이어)이 제조업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1990년 45.6% → 2004년 55.8%)하여 전국평균(39.9%)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3대 주력업종(화학·철강·정유)이 제조업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에서 고위 및 중고위 기술산업<sup>9)</sup>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고위 및 중고위 기술의 구성비가 1995년 62.8%에서 2004년 68.9%로, 전남의 경우 36.5%에서 40.8%로 상승하고 있다.

## 2. 한·중FTA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 FTA 추진의 열쇠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농수산물시장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면에서 세계 최강인 중국과 승부를 겨루기는 힘들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일 FTA와 한·중·일 FTA 협의 및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바로 농수산물 분야의 개방 여부이기 때문이다.

한·중 농수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내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시 많은 품목에서 일방적인 중국의 수출 확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네 가지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1) 중국 동북부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2)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3)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4) 중국의경제규모가 우리를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일방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sup>10)</sup>

농수산업 분야는 한·미FTA 보다 훨씬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농수산업의 경우 한·미FTA와 비슷한 수준에서 한·중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하면, 피해는 3-4배에 달할 것이며, 규모도 문제지만, 대다수 농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치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sup>11)</sup>

9) OECD는 R&D 집약도에 따라 제조업을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산업의 4등분하고 이중 고위기술과 중고위기술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고위 기술은 항공기, 사부·계산·회계용 기계, 의약·의료용 화합물,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이며, 둘째 중고위기술은 의료·측정·시험·기타정밀기기, 자동차·트레일러, 화학·화합물, 기타전기기계, 기타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이며, 셋째, 중저위기술은 고무·플라스틱, 코크스석유,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 1차철강,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이며, 마지막 저위 기술은 음식료·담배, 펄프·종이제품, 출판·인쇄, 섬유·의복·가죽, 목재·나무제품·가구이다.

10)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p.103-105.

11) 문향란, “한·중 FTA 가시권에 하반기 협상 시각할 수도-농수산 대책부터 세워야”, 인터넷한국일보, 2008.6.10.

## 1) 농축산업부문

중국은 쌀, 콩 등 농산물 품목의 구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다 가격은 25~35% 수준이며,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면, 우리 농업생산은 2005년 대비 20%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4년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고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액은 무려 116억 7,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류는 가장 많은 79억 6,900만달러어치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고, 이어 기타 농산물(19억 1,000만달러), 가공식품(14억 7,200만달러), 채소과일류(2억 8,900만달러), 축산물(3,100만달러), 임산물(100만달러)의 순으로 분석됐다.

국내 농업이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중국산 농산물가격은 우리의 20% 수준이다. 중국산 농산물 1조원어치가 수입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이 5조원가량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5년 우리나라 농림업 총 생산액이 36조 2,729억원임을 감안하면 농업분야의 피해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쌀 재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우리는 사과·배 등 5개 과일류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때 메기는 조정관세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기로 중국과 약속했다. 따라서 채소과일류의 수입증가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보다 훨씬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산 쇠고기나 돼지고기, 낙농품 수입은 일체 금지된 상태이며,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도 제한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중국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WTO(세계무역기구)는 질병과 병해충 발생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예컨대 중국 헤이룽장성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이곳에서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진 원안성 돼지고기는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도 언젠간 수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 2) 수산물 분야

한중 FTA로 인한 수산부문의 총 피해액은 연간 7,532억원~1조 1,379억원으로, 어가하락에 의한 피해액은 2,943~4,432억원, 동종 어종의 수입 대체로 인한 생산량 감소액은 3,005~5,363억원으로, 국내 어종과 중국산 타어종간의 대체로 인한 피해액은 1,58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출어포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제비용, 수산가공업, 운반업, 조선업 등 연관 산업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중 FTA에 의한 피해는 더욱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중 FTA의 피해를 어업별로 보면 분류 기준을 대상어종의 생산금액으로 일반 해면어업은 4,021~6,597억원, 양식어업(뽕장어 포함)은 2,534~3,269억원, 내수면어업은 171~253억원, 원양어업은 806~1,260억원

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황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어종의 생산이 가능하여 연근해 어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의 내수면·양식어업의 생산량이 해면·어획을 증가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산업의 전분야 걸친 큰 타격이 예상된다.<sup>12)</sup>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에서 1.7~1.8%를 중국은 3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300만톤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수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36.8kg에서 2005년 48.1kg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2000년 87.7%에서 2006년 64.3%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90년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국이 된 이후 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세계 1위의 수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주요하게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조기, 낙지, 꽃게 등이며 수출하는 품목은 대구, 오징어, 명태 등이다. 한·중 수산물 관세는 우리나라는 실행세율이 평균 18%인 반면 중국은 24.8%로 나타났다.<sup>13)</sup>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다랑어, 굴, 오징어, 연체동물, 해조류 등의 냉동품이다. 중국의 수출우위 품목은 뱀장어, 잉어, 가자미, 게, 굴, 오징어, 문어, 고등어, 새우 등으로 특히 활어류인 뱀장어, 잉어, 기타 활어와 냉동가자미, 문어, 해조류 등은 우리나라의 수입우위 품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연간 500만불 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오징어, 꽃게, 낙지, 갈치 등 23개 품목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 냉장 활어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단가를 비교해보면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의 47.5%수준이다.

관세의 경우 FTA협상에서 인하기간 연장보다는 미양허 품목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WTO·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식 조정계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계수 적용시 수산물 관세가 현 18%에서 5.54%로 감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FTA사례처럼 인하기간을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다. 중국과의 FTA에서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미양허 품목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 IV. 농수산부문의 대응방안

### 1. 농축산업 부문

#### 1) 일반적 대응방안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

12) 김현용·송경은,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II)」, 수산경제연구원, 2008. pp.109-115.

13) 신성아, “한·중 FTA 체결 수산부문에 어떤 영향 미치나”, 농수축산신문, 2008.10.8.

조업과 달리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 시 일방적인농업 수출확대 및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4가지로 첫째,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넷째, 중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를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일방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sup>14)</sup>

이상의 네가지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하여 국내 농업시장을 잠식할 경우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지수 분석에 위하여 농업 내부에서 상호협력적 발전모델을 구축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시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 특성 상 농업인력 및 토지 등 자원이 타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FTA 체결시 농업개방에 집착하는 경우 정치적 리스크 및 사회보장 성격의 농민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FTA 타결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FTA 논의시 농업부문 개방을 FTA 추진의 제약조건 또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후 FTA를 통한 국민경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초래할 경제적 결과는 WTO 다자간 협상에서 국제적으로 타결될 시장 개방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중국에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어서 다자주의 국제 통상질서 하에서 한국시장 접근을 추진하는 기타 국가의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적극 강조하여 중국의 요구조건을 낮추는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부문을 개방함에 있어 WTO 다자주의 협상에서의 개방정도 이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중국 농업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고품질화로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유지시키는 구조조정 전략이, 즉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된다.

FTA는 양자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의 특성을 갖는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내에서의 협력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농업부문 교역에서 품목별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는 가공식품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 2) 경쟁력 요건

한국농업의 희망적인 요소는 많으나 몇 가지로 대별하여본다면, 첫째, 기술과 경영능력을 구비한 우

14)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103.

수경영체·우수농업인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농업인은 세계 최고수준의 쌀, 채소류 생산기술 보유하여 쌀 생산성은 한국 490kg/10a, 일본 487kg/10a로 세계최고 수준이고 파프리카 생산성도 한국 8,687kg/10a, 일본은 피망포함 2,792kg/10a로 기술에서 앞서고 있다. 또한 IT기술과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고소득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둘째, 우수한 농업 인프라(시설, 농자재, 비료, 종자 등)의 구비하여 벼, 채소종자 등 세계 상위수준의 종자생산기술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집중 투자로 논경지 정리를 90%, 벼농사 기계화율 90% 달성하였고 세계 유수의 시설원에 보유국으로 한국 52.0, 일본 52.6 천ha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경영의 혁신 가능하여 인터넷 이용 최신 농업기술, 소비자 요구, 가격동향 습득·분석하여 농가 경영에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새로운 시장 개척하여 인터넷 이용 전자상거래 규모가 '05) 2,500억에 이르고 있다. 넷째, 한국은 우수한 농업환경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가능한 천혜의 지역이다. 그 예로 대한민국은 고품질 쌀 생산에 가장 유리하다. 일본은 화산회토로 카드뮴 등 중금속 많고 잦은 태풍으로 쌀 품질 저하가 문제이고 중국은 동북3성 극조생 재배, 냉해 등 재해로 고품질 쌀 생산 곤란한 점이 앞으로 한국의 쌀이 세계 시장 특히 동북아 시장 및 세계 고품질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인식이 우리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올려놓는 공신이 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 충족 및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4.4%수준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여 생산하여 한국 농산물의 이미지는 친환경이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가 될 것이다.

### 3) 대응방안

#### (1) 품목별 농업경쟁력제고기술 개발로 수입개방화 대응<sup>15)</sup>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쌀 자급을 90%이상 유지하도록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쌀 생산(밥맛, 투명도, 균일성 등 개선)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특수미의 다양화 및 복합화하며, 가공적성(인스턴트 면류, 스낵류, 무균포장밥, 쌀 음료 등) 품종과 의약대체, 미량원소 고함유 및 특이전분 기능성 품종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최고과실생산 프로젝트 추진으로 고품질 경쟁력 생산체계 지속 유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기호 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신품종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 과일 생산체계 확립 및 고품질 과실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한 국산과실 차별을 위한 병해충종합관리(IPM)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과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수출 물량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생활원예의 확산하여 도시민에게 녹색 공간 제공,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하고 고추, 마늘 등 수입증가 예상 작목은 고품질,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확보하고 경쟁력 우위작목은 생산단지 전문화, 고품질 생산으로 수출 확대하며 식물공장 등 첨단시설을 이용한 안전한 국제 표준 농산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농촌진흥청, 미래성장동력, 농업현장 신속대응 농업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2008.

넷째, 한우 육질 고급화를 통해 『한우=고급육=안전육』의 이미지 지속적 강화하고 고품질·안전돈육 소비 기호 및 요구 충족시키며,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건강 기능성 우유 개발로 고부가 가치 확보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연구로 축산물 국가단위 안전관리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섯째, 버섯병 재배 기술은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버섯생산의 자동화 시스템구축 지원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하고 대량생산 자동화 시스템에 맞는 품종육성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재배기술 개발 및 규모, 단지화하고 청정재배,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개발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점유율 유지되도록 GAP 및 생산이력추적 제도 조기 도입하고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판별기술 개발(원산지, 품종 및 연근)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다양화로 수출 극대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하면서 품질표준화 및 과학적 효능 구명으로 고려인삼의 차별화 확보하여야 한다.

일곱째, 논 적응 초다수성 식용콩 생산기술 보급으로 벼대체 및 소득 보전하고 두부 전용 콩, 유색나물콩, 찰옥수수 등 한국 고유품종 육성하며, 국산 콩 판별기술 개발 보급으로 수입 콩의 시장유통 교란 방지하여야 하고, 총채보리 도입 등 국제 경쟁력 있는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최대생산 기술 개발 하여 유채·맥류 도입한 작부체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식품자원화 및 전통식품의 외식 산업화로 지역식량체계 구축 및 미래 소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 개발 지원하여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연구·홍보로 국가이미지 제고하여야 한다. 앞으로 토종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상품화로 농외소득원 창출하고 대량소비를 통한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하며 지역생산-지역소비와 미래소비자 육성으로 농업의 지속성 유지되어야 한다.

## (2)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로 미래농업 선도16)

시장개방등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에 이어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 첫째, 생명공학 지적재산권 확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우선 활용 및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 고유 생물자원 유전체 연구 지속적 추진하고 분석된 유전정보를 분자마커, 유전자 기능, 생물정보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국내 유전체 및 유전자 관련 기술과 정보 네트워크 구축하여 농산물 유전체 해독 및 유전자 기능분석 결과의 독점적 산업재산권 확보하고 연구결과 및 특허 활용성 제고하여 산업계 연결지원 시스템 강화하여야 한다. 급후 한국 고유의 유전자개발, 특허 등 확보 및 활용으로 농업생명공학 및 관련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 구축하여 부가가치 2조 시장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신기능성 형질전환 작물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국제시장 겨냥 농업 BT 제품 개발로 독점적

16)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21사업단은 2010년 세계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 진입과 농업을 국가 부창출의 주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고유의 원천기반기술 연구강화, 농업에 적용가능한 실용화 연구강화, 고부가 신소재 개발 등 연구목표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있다.(자료 : <http://biogreen21.rda.go.kr/>)

인 지위 확보 추진하여 노동력, 비료, 농약 등 저투입 친환경 농업용 GM 작물 개발하고 국내외 수요 시장점유를 위한 기능성 강화 고부가 물질생산 작물 개발하여 생리기능성 물질 강화 등 웰빙 수요 충족 제2세대 농업 BT 작물 개발과 고부가 의료용 및 산업용 소재 생산용 제3세대 농업 BT 작물 개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바이오 신약·장기생산 형질전환 동물 산업화 기술개발이다. 2010년까지 바이오 신약을 생산할 수 있는 가축을 10종 이상 개발 및 산업화하고 체세포 복제동물 생산기술 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바이오 장기 생산을 위한 무균 미니돼지 증식 체계화 하여야 한다.

넷째, GMO 안전관리 경쟁력확보 기술개발 전략이다. 주요 GM작물 판별기술 개발을 통한 GMO 표시제 시행 뒷받침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가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주요 GM작물의 환경 및 식품 위해성 평가 연구 추진 및 농업생명공학 국제 쟁점 대응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하여야 한다.

여섯째, 잡사, 곤충의 신기능 이용 고부가가치 창출 경쟁력확보 기술개발이다.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기능성 양잠산물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소재화하고 웰빙 시대에 부합하는 기능성 실크 생산 및 산업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용곤충의 다양한 용도 개발 및 산업화 촉진 기술 개발과 곤충 생명공학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로 고부가 바이오 소재화하는데 곤충의 유용유전자(물질) 발굴 및 생체공장화 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일곱째, 농업유전자원 이용 신작물 개발 경쟁력확보 기술개발 전략이다. 국가자산인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극대화로 국가경쟁력의 기반 구축하고 보유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연구강화를 통한 활용 촉진 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성 물질 및 신소재 개발·탐색으로 산업재산권 선점하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3) 안전성 확보기술로 한국농산물 국가 이미지 제고**

국내 농업 현실상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들은 농업계가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품별로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간다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뚫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sup>17)</sup>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인 요인이 확보되면 무엇보다도 물·공기·토양 이용 세계적 안전 농산물생산 확보기술개발이다. 농업환경 유지·보전 관리기술 개발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은 작물생산환경 변화, 지역별 기후특성 DB화하여 취약농경지 등 오염관리 강화 및 유기성자원 순환이용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자원 고도 이용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에서 농업토양정보시스템 강화 하기 위하여 농업환경지도(환경, 토양, 양분, 미생물 등) 작성하여야 하며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 개발하여 양분총량제 도입, 양분관리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안전 생산시스템 확보기술개발이다. 청정생산기반

17) 서울경제, 새로운 도전의 시대-농업, 2007. 4.22.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오염관리 및 유해물질 유입 차단하여야 하고, 유해물질 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GAP 가이드라인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하여 친환경농자재 활용기술, 농약사용 경감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 (4) 주요 농자재 개발 수출로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

농업분야가 총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종자산업 규모가 큰 식량작물 등은 정부주도로 종자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하고 채소는 민간업체에 첨단 육종기술을 개발 지원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장미, 딸기 로열티 대응 우량품종 집중 개발 보급하고, 우수 국산품종 개발로 도입품종을 대체하고 수출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IT 등을 이용한 첨단농기계 개발로 기술경쟁력 확보하고 농작업 및 수확후처리 기계화·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하며, 농기계의 품질 및 안전성 평가기술 확립으로 고품질 농기계 수출 지원하여 중국 등 잠재적 수출시장에 대한 농기계 산업정보 수집 분석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토착 친적 및 미생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개발된 친환경자재는 중국, 러시아 등 세계시장 개척을 하여야 한다.

#### (5) 농촌자원 개발로 세계 관광 명품화

새로운 경제가치재로서 발굴 및 자원정보 웹 서비스로 농촌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하여 관광, 건강, 문화를 접목한 농촌관광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하고 농촌 관광 제고 내수시장 25% 달성 및 세계관광 명소화하여야 한다. 농촌지역 관광산업 창출로 선진국형 농가소득 구조로 전환되고 도농교류 및 농촌 관광을 증진하여 농촌인구 20% 유지하게 될 것이다.

#### (6) IT·경영기술 접목으로 전문 농업실현

기술·경제·마케팅이 융합된 농업경영 기술개발로 현장연구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체 발굴 육성, 지역농업육성전략 등 농업경영 현장모델 개발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확후 경영관리 기술 개발하며,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농업과학기술 마케팅 기법 개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정보기술개발 보급으로 미래지식농업의 성장동력 창출하여야 한다.

## 2. 수산업 부문

농축산업부문에 이어 수산업분야는 한중FTA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분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시된 정부 정책적 및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18)</sup>

첫째, 생산설비 현대화·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예외 없는 개방화 시대 수산업의

18) 김현용·송경은,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II)」, 수산경제연구원, 2008. pp.125-154.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후한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개발하는 등 품목별로 다각적 방안이 요구된다. 명태 원양어업(북양트롤)은 현재 21년 이상 된 원양어선의 노후설비와 급냉시설을 2013년까지 교체하는 등 생산설비를 현대화 계획이며<sup>19)</sup>, 민어 원양어업(해외트롤)에 대해서는 어획물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해 영세한 원양선사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수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수산업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연근해 어업 위주로 예정된 구조조정 사업 범위를 수산업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고, 연근해 어선 감척은 2010년 완료로 목표로 추진되며, 양식어업 구조개선은 적조·태풍 등 재해 상습발생 어장 구조조정과 연계해 검토될 전망이다. 원양어업 분야는 FTA 협상결과를 감안해 폐업지원이나 해외합작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수산가공산업 지원과 유통시스템 개선,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산업의 소득기반을 마련한다. 수산물 가공물류센터와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으로 첨단 수산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 다양한 어촌관광 인프라 개발로 어업 외 소득을 늘려준다.

마지막으로, FTA에 따른 수산업 분야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과 FTA 협약에 따라 매번의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안정적,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및 지원이 요구된다.

## V. 결 론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분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준비 단계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공동체 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

한중간의 쌍무적 FTA는 정치·경제적 효과가 동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경제통합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금까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역내 다자간 FTA

19) 고등어 대형선망에는 유통시스템 개선책의 한 방안으로 '황어 운반선 건조' 지원, 오징어 연근해채취기 업체에는 '에너지절약형 집어등 기술' 개발로 유통비를 2/3 수준으로 절감, 넙치·볼락 등 해면양식 어종에는 항공운송에 비해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운송용 특수수조 컨테이너 제작을 지원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중간의 무역 및 경제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중국 간에는 1990년대 이후 무역 및 투자 양면에서 상호의존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에 관한 분규도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및 투자관련 마찰 요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간 호혜적 분업 기회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제도적 통합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경제 통합이 가져오는 안보적 외 부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양국간 FTA가 필요하다.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는 북한과의 교류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중간의 FTA는 한미 FTA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농축수산업 개방에 대한 반대는 중국과의 FTA에서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FTA는 농축수산분야이기에 국민들의 관심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의 국내협상이 수행되지 않고 국외협상이 원만히 수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국외 협상에서 FTA에 대한 득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수축산업의 구성원간의 이해와 경쟁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에 따른 광주전남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히 광주전남에 한정된 영향이 아닌 전국의 농수축산업 분야에 영향이 있으므로 국가전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김남두,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
- 김현용·송경은,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II)」, 수산경제연구원, 2008.
- 남영숙 외, 한 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농촌진흥청, 미래성장동력, 농업현장 신속대응 농업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2008.
- 문향란, “한-중 FTA 가시권에 하반기 협상 시작할 수도-농수산 대책부터 세워야”, 인터넷한국일보, 2008.6.10.
- 박장재, “광동의 화교경제와 중국-홍콩간 CEPA 체결의 영향”,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2003.
- 서울경제, 새로운 도전의 시대-농업, 2007. 4.22.
- 신성아, “한-중 FTA 체결 수산부문에 어떤 영향 미치나”, 농수축산신문, 2008.10.8.
- 신태용 외,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5.

- 썬 자,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주간경제 936호, LG경제연구원, 2007.
- 양평섭 외,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여수옥, “중-칠레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2005.
- 이은화, “2006년 중국수산업현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구촌 해양수산 : 수산환경(제352호), 2007.
- 이홍식 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 효과, KIEP, 2004.
- 임윤상,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은조사연구 2002-8. 한국은행 조사국, 2002.
- 정상은 외, 수교 15주년을 맞이한 한중 경제관계의 회고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6.
- 주문배·정명화, 중국의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확대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 경제구조의 변화와 과제, 2006.
- \_\_\_\_\_ ,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2008.
- 홍정륜,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중국학연구 제39집, 중국학연구회, 2007.
- Choong Yongahn&Chung Inkyo, A Search for closer economic relations in east asia,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Vol. 58, No. 2, June 2007.
- Lee, Hong sik, et al.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I).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5.